노홍석 신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취임

"도민 삶 속에서 숨 쉬는 정책 만들 것"

"전북, 전례없는 전환점 실행 중심 도정 실현"

전북특별자치도 제45대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노홍석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사진 오른쪽)이 19일 공식 취임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제45대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노홍석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9일 공식 취임했다.

고향 전북을 위해 다시 돌아온 그는 "도민의 삶 속에서 숨 쉬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노 부지사는 도청에 도착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뒤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 따뜻한 격려와 인사를 전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전북이 처한 시기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대광법 개정, 전주 하계올림픽의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변화의 흐름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정책은 보고서나 책상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갖는다"며, 현장 중심, 실행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 부지사는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광역교통망 확충,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정과제 반영 등을 통해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 부지사는 1969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방고시 1회 합격 후 다양한 보직을 거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등을 역임하며 자치행정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만호 기자

'분업 · 협업' 으로 도정 에너지 결집

김관영 도지사, "하계올림픽 유치, 역량 결집해야 할 과업"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등 도정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정이 전략적 분업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촘촘한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하계올림픽 유치는 도정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핵심 과업"이라며, "유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각 실국은 임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분업과 실국 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선8기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정 신뢰의 척도인 만큼, 전 실국은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며, "달성한 공약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홍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대광법을 통해 전북권역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미래 발전축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시행령 개정, 국가계획 반영, 용역 추진 등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수혜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메가 샌드박스 구상과 관련해, 전북이 미래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전북형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제도 실험장으로서의 위상을 선점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달 말 예비지정이 예정된 글로컬대학30과 관련해 "대학과 지역은 운명공동체로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강조하며, "예비지정이 통과되면, 본지정 대응 시 지역의 모든 대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이 19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전북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민주 이재명 후보 전북특보단 공식 출범

지지층 결집 · 중도 확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은 19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전북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수여식은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안호영 수석부단장과 박희승 전북특보단장도 함께 참석해 전북특보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 전북특보단'은 도내 14개 시·군 조직특보를 중심으로, 13명의 직능특보가 전문성을 보완했으며, 19명의 정무특보단이 지지 기반을 더하며 촘촘하고 탄탄한 선거조직 체계를 갖췄다.

또한, 이돈승 지역언론특보단장을 포함한 26명의 총괄특보단도 함께 임명되어 전북지역 특보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전북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역사의 전환점마다 앞장서 온 주체였다"며, "12·3 내란을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보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부단장은 "전북 대표주자인 특보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특보단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희승 전북특보단장은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이 특보단의 목표"라며, "이는 전북인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개헌, 제7공화국 향한 국민 주권 실현돼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9일 성명을 내고 "개헌은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확대, 권력기관 견제를 포괄한 종합 개헌안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시, 결선투표제 도입,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의미 있는 제안으로 꼽았다.

박 실장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헌법기관 설치 제안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며 "지역이 중앙정부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헌법상 대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주거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헌정적 토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 권한의 분산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❶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❷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북 지역아동센터 돌봄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❸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❹전북 후계농업인 대표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도내 사회 · 아동 · 농업 관련단체 "이재명 지지 선언"

임실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 전북 지역아동센터 돌봄 노동자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 1만4000 전북 후계농 시군 대표단 등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사회·아동·농업 관련단체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농어촌 주민수당 공약 전폭 환영"

먼저,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김진명 상임본부장(전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임원 30여명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여 명의 회원들을 대표해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주민수당' 공약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이주현 대표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함께했다.

이들은 "농촌주민수당은 임실군민이 건의하고 이재명 후보가 수용한 정책"이라며 "이는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북 지역아동센터 돌봄노동자들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할 적임자"

전북 지역 아동돌봄 노동자들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아동센터 돌봄노동자 15명이 모였다.

박지영 마이용지역아동센터 센터장(돌봄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채현주 1318 HappyZone 행복스케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전북지부장)이 지지 발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와 현장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돌봄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초등돌봄 정책도 제시하고 있어 아동 돌봄 공공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미래를 키우는 보육국가, 이재명과 함께"

(사)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옥) 연합회도 "미래를 키우는 보육국가!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의회 임승식 농업환경복지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윤수봉 도의원, 국주영은 전 도의회 의장 등도 함께해 지지의 뜻을 더했다.

신은옥 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통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북 후계농업인 대표자들 "농업 위기 극복의 적임자"

전북지역 후계농업인 1만4,000여명을 대변하는 시군 대표자 50여명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도 동참해 힘을 실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전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이하 한농연 전북) 이훈구 회장은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촌 소멸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실천력 있고 준비된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농가소득 보장, 지역 소멸 대응, 식량 자급, 기후 위기 대응, 첨단 수출 농업 육성, 농촌복지 확대 등 우리가 요구한 정책 방향과 가장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김제시 주장 반박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가 19일 성명을 내고 정성주 김제시장이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주장한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정 시장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근거보다 감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며, "관할권 주장은 법과 절차,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기고문에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라는 논리를 폈지만, 군산시의회는 이를 "판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왜곡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판단하면서 △기존 육지와의 연결성 △접근성 △행정서비스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방조제 '내측'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도내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 '맞손'

전북사회복지사협회-민주 도당, 정책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주종)는 1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과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도당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28일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현실적 요구와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정책 반영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이원택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박주종 회장,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협약의 필요성과 향후 실천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을 나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가이드에 의한 임금 현실화 및 임금기준 법제화, 정년기준 상향 노력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을 도의회와 협의 △사회복지연수원 전북 유치를 위해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추진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유급 안식월제도 정책화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현장,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